

데스크 시국



홍행기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요즘 정치권에 부는 기본소득 바람이 거세다. 처음 미봉처럼 불던 바람이 어느 순간 회오리로 변해 여의도를 집어삼키더니 이제 태풍이 되어 온 나라를 휩쓸 태세다. 재산이 있던 없던 노동을 하든 말든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 기본소득이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파격적이고 생경한 이 정책이 전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이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 승패 가를 강력한 프레임

사실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비주류의 급진적인 발상' 쪽으로 폄하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이 정책이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집행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듯하다. 기본소득이 전 국가적 정책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과 함께, 상당수 국민들이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코끼리가 된 기본소득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기본소득 열풍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이슈가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추이를 주목하는 모습이다. 최근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 지사가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데 올인하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경수 경남 지사 등 또 다른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 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공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정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이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공격했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나?"며 기본소득을 직격했다. 김 지사도 최근 "이 지사가 '기존엔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기본소득을 할 경우)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거뒀야 한다"며 '알레스가 빠고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하면서 '사회적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 대선 구도에서 이재명 경기 지사가 연일 부각되고 있는 것도 기본소득이라는 그의 '브랜드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떤 프레임이 부정하면 그 프레임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프레임은 자주 활성화될수록 더 강해진다. 이 사실이 정치 담론에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내가 상대방의 언어를 써서 그의 의견을 반박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상대방의 프레임이 더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한편 나의 관점은 약화된다." 인지언어학의 창시자 조지 레이코프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서론에 나오는 문장이다. 레이코프는 이 책에서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며, 프레임의 재구성은 사회 전체적인 '공적 담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 복지 모델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제가 이 훌륭한 정책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 더 잘 다듬고 많이 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마도 이는 '자신이 주도하는 프레임이 공적 담론을 통해 강화되는데 대한' 뿌듯함일 수도 있겠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듯,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역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든 '사회복지 제도의 근본적 재구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대선 판을 뒤흔들 거대한 코끼리로 진화해 가고 있다. 대선을 1년여 남겨 놓은 지금, 잠룡들의 치열한 경쟁과 합리적 토론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적 담론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복지 모델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 겸 여론고교장

이웃과 소통하는 공감 능력

이라도 깎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라는 문자를 임대인에게 보냈다가 다음날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렇듯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살 만하다. 선행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바로 행복감이다.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망설여지고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용기를 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폐지를 주워 살아가는 노숙자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거나 공감력을 키워 나갈 때 사회적 집단 면역도 높아질 것이다. 고급 차를 탈수록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곤 싸잡아 이야기해서도 안 될 일이다. 전방 좋은 집에서 나만의 행복을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며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인간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는 문화 류씨 10대 종가인 '운조루' (雲鳥樓)가 있다. 조선 영조 52년(1776년)에 낙안군수 류유주 선생이 지은 99칸짜리 양반 가옥이다. 운조루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쌀이 세 가마나 들어가는 뒤풀 때문이다. 200여 년 된 원통형 뒤풀 아랫부분에는 '타인능해' (他人能解)라는 네 글자가 적혀있다. "누구나 잘 뒤풀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운조루의 주인이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뒤풀을 열어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운조루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배분 쌀은 한 해 수확량의 20%나 됐다고 전해진다. 이 뒤풀은 흐릿한 집 뒷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어 길가는 이웃과 마주치지 않는 자리에 뒀다. 동네에서 배를 끓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다. 운조루의 주인이 실천하고자 했던 '나눔의 실천'은 이웃과 공존하려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의 전형이다.

살다 보면 바쁜 생활 속에서 가끔은 삶이 권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러한 권태는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깊은 곳을 응시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항상 고요한 마음의 상태 즉, 평정심을 유지하는 비결은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보일 때 가능하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회적 삶의 추구는 요원할 것이다.

생활을 같이하는 공동체는 서로 기쁨 수백에 없고 나아가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의 삶이 가능하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바로 연대의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는가? 이는 '코로나19'가 던진 질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리의 친구들이 건강하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야 동네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30년 전 한국에 와서 사제 서품을 받고 성당에 있는 '안나의 집'에서 빈민사목(貧民司牧)을 하는 이탈리아 출신 김하중 신부의 말씀을 되새길 때가 아닌가 한다.

기 고

'주먹밥 공동체' 5월 정신을 되살려야

보인대 어쩌라. 최근에 대선배님의 전화를 받았다. "어이 잘 있는가" "예. 선배님은 건강하신가요?" "지금은 100미터도 걸을 수가 없네" "어찌야 쓰꺼라 빨리 좋아지셔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살겠는가? 5-18 동네가 시끄러운게 몸이 더 아프고 전화받기가 정해시" "아이쿠 쇠송합니다" "광주가 어떤 곳인가? 더 이상 민낯을 보이면 안 되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분부터 친구와 선후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전화에 동네북이 된 느낌이다. 쑥스럽지만 해명을 하자면 이렇다. (사)5-18민중화운동 부상자회가 조그만 수익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부상자의 명칭이 들어가면 쉽게 될 줄 알고 구속자, 부상자, 기타 등급, 유족들을 묶어서 구속 부상자회가 승인 요청을 했다. 유사한 명칭은 당연히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하건만, 맏조사... 보존회에서 2010년도에 도장을 찍어줘 버린 것이다.

아무튼 최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보존회에서 3개 단체를 방문해 입장을 밝혔다. 세 단체가 주도하여 준비를 하되, 3개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수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민주적 과정을 거치도록 하라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이

58조 부칙 2조 3항이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구성하여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다. 그래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해 회장과 임원이 되겠다는 환상을 품은 게 화근이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들과 시민 여론은 이렇다. 첫째, 5-18 단체는 민주화를 위해 싸운 단체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선제를 해야 명분이 있다. 둘째,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차기 회장이나 임원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된다. (제책 사유와 객관성) 셋째,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선관위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넷째, 임원의 임기를 2년 또는 3년 단임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도덕성과 지도력과 상징성을 겸비한 사람을 추대하도록 하자.

그래서 하는 말이다. 보훈처가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되거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기본적인 지침을 전달해야만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사랑받는 공명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보존처의 배려와 용단이 필요한 이유다. 어디 보훈처만 탓하랴. 아직도 5월은 '겨울 공화국'이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5월 단체도 이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 인식하고 존경받는 공명단체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5월 영령과 국민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닐까? 주먹밥 공동체 5월 정신으로 희망찬 봄을 맞으려 하자.

社說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한 치의 차질 없도록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오는 11월까지 주당 70% 이상이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자 함이다.

우선 광주시 인구 145만 명의 70%인 101만 5000명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게 된다. 이 가운데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1차 접종 대상은 148개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자와 종사자 1만 956명이다. 사전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94.5%가 접종에 동의해 우려했던 기피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5월엔 고위험 의료기관 160개소 1만 4415명과 119구급대·역학조사·검역·검체 채취 인력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전남도의 경우는 156만 명의 접종 대상자 가운데 3만 3725명이 1차 대상이다.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 중 95%가 접종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접종 절차는 1차 접종 후 1-2개월 사이에 2차 접종까지 해야 마무리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 후 1년여 만에 시작되는 백신 접종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규모 접종 과정의 혼선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렸다.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는 '접종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겠다'는 응답이 30-40%나 될 만큼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정치인들도 백신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준비-발열 체크-예진-접종-관찰까지 백신 접종 전 과정에 대한 치밀한 사전 훈련으로 혼란을 막아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촘촘한 협력으로 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접종률을 끌어 올려 코로나 사태 종식과 일상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월 국회 처리 무산 한전공대법 3월엔 꼭

한전공대 내년 개교를 위해 절실한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건너갔다.

그럼에도 그나마 법안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불사'는 살려 놓았다는 평가다. 그동안 법안 소위에서 다른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한전공대법에 대해 여야가 처음으로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앞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표결에 이르는 토대는 만든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그제 성명을 내고 "에너지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분야 기초과학 연구와 전문 인재 양성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

에너지공대는 앞으로 우리 아들·딸들이 먹고사는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남아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에 몰두하면서 한전공대 특별법이 의연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전력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존 지역 대학을 활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대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많아 이들을 보완하는 게 한전공대 설립보다 낫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야당에 대한 설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힘 원내 지도부와 위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느 50대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겪은 이야기다. 부장인 그는 어느날 20대 여직원 이 "오- 짬바 줘 나오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 짬밥이라고 알아들은 그는 "에이- 내가 이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짬밥이 있지"라고 의기양양했다. 그러자 여직원은 웃으면서 "짬밥이 아니고 짬바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순간 신조어라는 것을 눈치챈 그는 "그래 짬바, 내가 언제 짬밥이라고 했나"라며 겸연쩍게 웃어 넘긴 후 인터넷에서 짬바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전문가적 직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세대들이 짬밥 대신 굵이 짬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데는 기성세대와 차별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지도 모른다.

요즘 낯선 신조어에 스트레스를 받는 기성세대들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 인터넷과 심지어 지상파 방송에서도 뜻 모를 신조어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쓰며 과시하다"는 의미의 '플렉스'는 이미 일반화됐고 '머신 129' (무슨 일이야?) '스블미를 찾아보았다. 짬' (스스로 불러 온 재앙) 같은 용어도 빈번하게 쓰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장한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다닐 정도의 동네 상권), '확전자' (코로나가 낳은 비만), '브이노믹스'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은 경제)는 언론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다. 신조어는 트렌드를 보여 주는 지표가운데 하나다. '라떼 세대' (기성세대)와 구분 짓고 싶어하는 신세대들의 신조어 사용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다.

'짬바'와 '짬밥'

짬바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Vibe)의 줄임말이다. 오랜 경력이나 경험이란 의미의 '짬'과 분위기를 나뉠을 뜻하는 '바이브'의 합성어로 '베레랑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말한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멋진 행동을 할때 흔히 '짬바가 있다'라고 표현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유명 래퍼가 자신의 경력이 오래됐음을 강조하면서 사용한 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게 됐다.

짬(스스로 불러 온 재앙) 같은 용어도 빈번하게 쓰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장한 '슬세권'

군대 용어인 짬밥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짬밥이 그냥 경력만 오래된 것을 가리켜 낮춰 부르는 말이라면, 짬바는 베레랑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